

[테마북⑨] 2009년 대한민국의 절망과 희망

발행 | 2009년 2월 4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우 121-840)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인터넷 사이트 | <http://saesayon.org>

이메일 | media@saesayon.org

책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⑨] 2009년 대한민국의 절망과 희망

[새사연 테마북 9권 발간에 부쳐]

절망스런 현실에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려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한국의 민중들에게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기나긴 경제침체의 초입에 한국경제가 돌입한 탓입니다. 언론에서야 또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의 말대로 현재의 위기가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계경제 전체가 동반침체에 빠져 있고 한국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거품을 키우지 않는 한 경기 반전의 계기를 찾기에는 제법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하니 지나간 역사의 기억들이 불길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문헌과 영상의 이미지로만 남아 있는 70년 전 대공황의 기억입니다. 1930년대 당시 식민지 한반도는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제 파시즘 체제가 더욱 노골화되던 때였습니다. ‘대공황’보다 무서운 ‘일본제국주의’에 가려져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은 남의 일인 듯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제위기와 가장 닮은 역사적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하니 애써 책을 뒤져 교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직도 생생한 1997년 환란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 때 ‘희망’과 ‘퇴직’이라는 두 단어의 참으로 불가사의한 합성어를 처음 접했고, IMF가 독립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각서를 받아낼 만큼 힘이 세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희망퇴직’은 저고용-양극화의 시작이고, IMF는 금융자유화의 첩병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가 두루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200만 명에 육박했던 실업의 고통이 너무 커서(공식적인 통계로 1998년 한해에만 실업자가 92만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85만 명 늘었음) ‘아빠 힘내세요’라는 달콤한 위로에 지나치게 기대었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사연의 테마북 「2009년 대한민국의 절망과 희망」은 단순한 한해 전망 보고서가 아니라 흑한기를 뚫고 일어서는 차라리 ‘입장과 자세’입니다. 이름 있는 국책연구소와 민간경제연구소가 한 달이 멀다하고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는 때에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감히 단정할까 합니다. 새로움을 담지 못하는 것은 현 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물론 새사연만의 힘으로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지평을 명징하게 드러내기에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 테마북의 제목을 ‘절망과 희망’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망스런 현실을 비껴가지 않되 희망을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모든 답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테마북을 계기로 올 한 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키워갈 건강한 싹을 찾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새사연 회원과 국민들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전체 목차

- ◆ 2009년 한국경제 전망 및 정부의 역할(이상동).....7
 - _최근 경제 추세
 - _2009년 경제 전망
 - _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 ◆ 미국경제 회복의 장애요인과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여경훈).....17
 - _부동산 및 고용 상황
 - _경기회복의 장애 요인들
 - _미국경제 전망

- ◆ 반이명박 연대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전략(엄관용).....29
 - _신자유주의 보수혁명을 막아낸 촛불혁명
 - _2009년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재보권 선거
 - _수평적 반이명박 연대를 모색해야
 - _국민의 저항에 대해 제도정치가 답해야 할 때

- ◆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윤지훈).....35
 - _ '조정'과 '파산'의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남북관계
 - _2009년 북한의 선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자원 총동원령
 - _2012년에 맞춰진 북한식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행
 - _통미통중(通美通中)과 무한무일(無韓無日)
 - _파워엘리트의 세대교체
 - _2009년 남이나 북이나 경제에 올인 하는데...

- ◆ '죄수 딜레마'에 갇힌 한국교육의 3대 쟁점(최민선).....44
 - _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진 한국교육
 - _MB, 국민적 반대여론 무시한 교육정책 강행
 - _극심한 경기 불황 속 유일한 상승세, 사교육비
 - _2009년 예정된 것들
 - _ '교육대란'이 불러올 국민적 저항 예고

- ◆ MB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정연우).....54
 - _방통위·KBS 등 장악한 데 이어 본격 구조개편에 나선 MB정권
 - _언론관계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신문사의 방송시장 장악
 - _미디어랩 도입은 시청률 지상주의로 이어질 것
 - _MB정권이 꿈꾸는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는
 - _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 _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언론에 달렸다

2009년 한국경제 전망 및 정부의 역할

2009.1.12 | 이상동_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 sdlee@saesayon.org

목 차

1. 최근 경제 추세
2. 2009년 경제 전망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http://saesayon.org>

요약

지난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신호, 그것도 매우 빠르게 침체로 이어지는 신호가 감지되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이다. 신규취업자는 ‘제로 고용’ 수준까지 하락했고, 11월 광공업 생산지수의 -14.1퍼센트 감소,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09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다. 각종 경제연구소는 성장률 전망을 수개월 이내에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상반기 GDP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며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를 다소 보완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0.2~0.8퍼센트가 예상되며 1퍼센트 성장률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에 가장 기여도가 큰 투자부문의 심리회복을 기대하기 난망한 가운데 소비위축 요인들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고용 및 소득 감소, 자산가격의 급락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올해에도 금융불안 요소는 잠재되어 있다. 외부 요인 이외에도 한국경제는 상당한 내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부동산 가격의 하락, 건설업 PF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일본식 장기불황, 곧 L자형 장기침체의 신호가 보이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미래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인프라 등 사회적 자본의 질적인 확충, 직접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위기 전파 루트의 제도적 차단 등이 필요하다.(요약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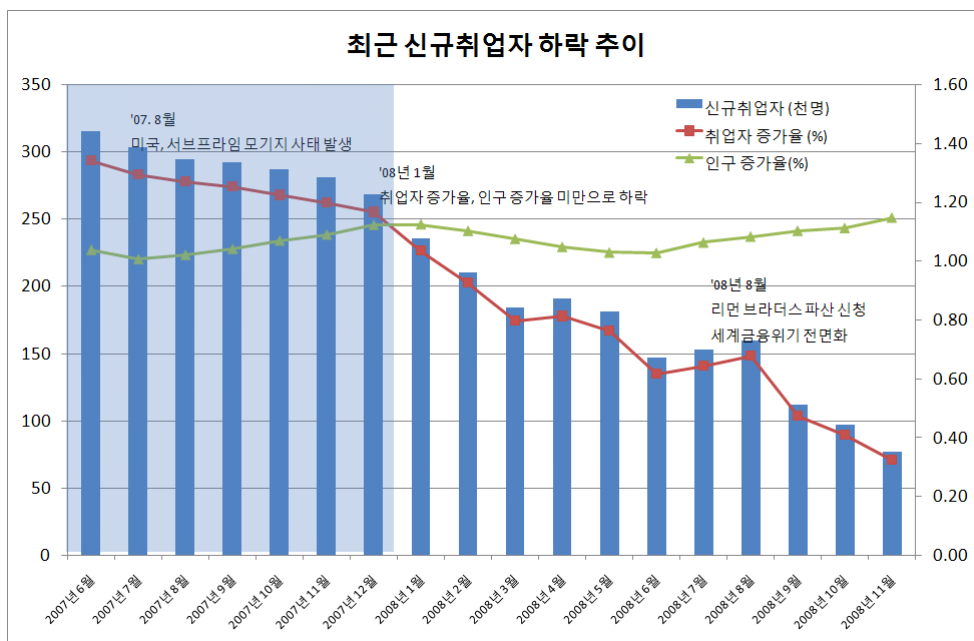
지난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뚜렷하게 전이되기 시작했다. 올 한해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경제의 생산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우려되는 이유다. 만약 올해 세계경제의 GDP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것은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초가 되는 것이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는 2009년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우리가 목격한 어떤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최근 경제 추세

2008년 4분기 GDP성장률 마이너스에 돌입

경제침체의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 2008년 4/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한국은행의 공식발표가 없었으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TV 출연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최근 모든 경제지표들의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이 모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최근 신규취업자 하락 추이



'마이너스 고용'으로 달려가는 고용 사정

지난해 8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전면화 한 이후 한국의 고용사정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8년 초입의 신규취업자 감소 수준만으로도 이미 IMF 환란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데, 하반기에는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청년층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마이너스 고용'에 들어섰고, 올 상반기에는 장년층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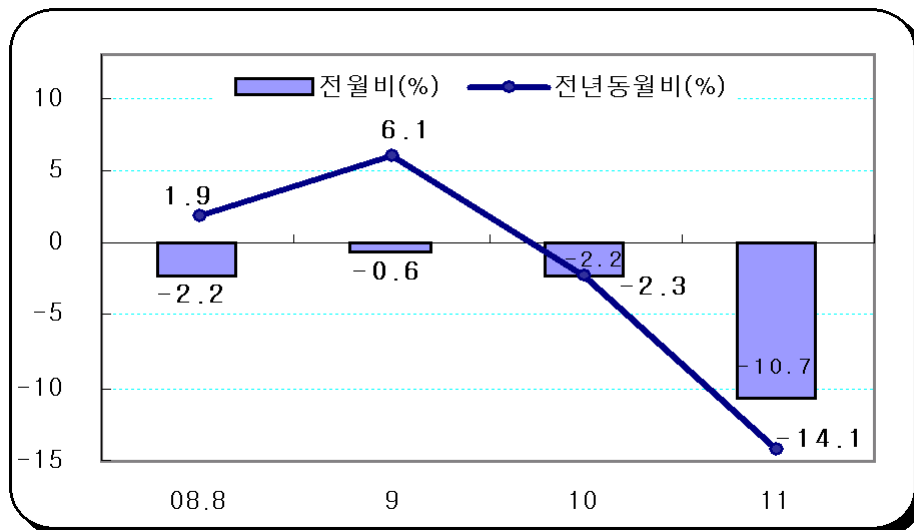
항목	2007 . 06	2007 . 07	2007 . 08	2007 . 09	2007 . 10	2007 . 11	2007 . 12	2008 . 01	2008 . 02	2008 . 03	2008 . 04	2008 . 05	2008 . 06	2008 . 07	2008 . 08	2008 . 09	2008 . 10	2008 . 11
실업률 (%)	2.9	3	2.9	2.8	2.8	2.8	2.9	3.1	3.3	3.2	3	2.9	2.9	3	3	2.7	2.8	2.8
고용률 (%)	60.8	60.6	59.8	60.2	60.4	60.4	59.1	58.3	58	59.1	60	60.5	60.5	60.3	59.6	59.8	60	59.9

출처 : 통계청 KOSIS DB

충격적이었던 11월 산업활동 동향

2008년 하반기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11월의 '광공업 생산지수'였다. 매년 약 7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해 오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11월에 갑자기 -14.1퍼센트(전년동월비)나 감소했다. 이는 바로 전달인 10월까지만 해도 약 -2퍼센트대 감소를 보이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재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정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광공업생산지수 하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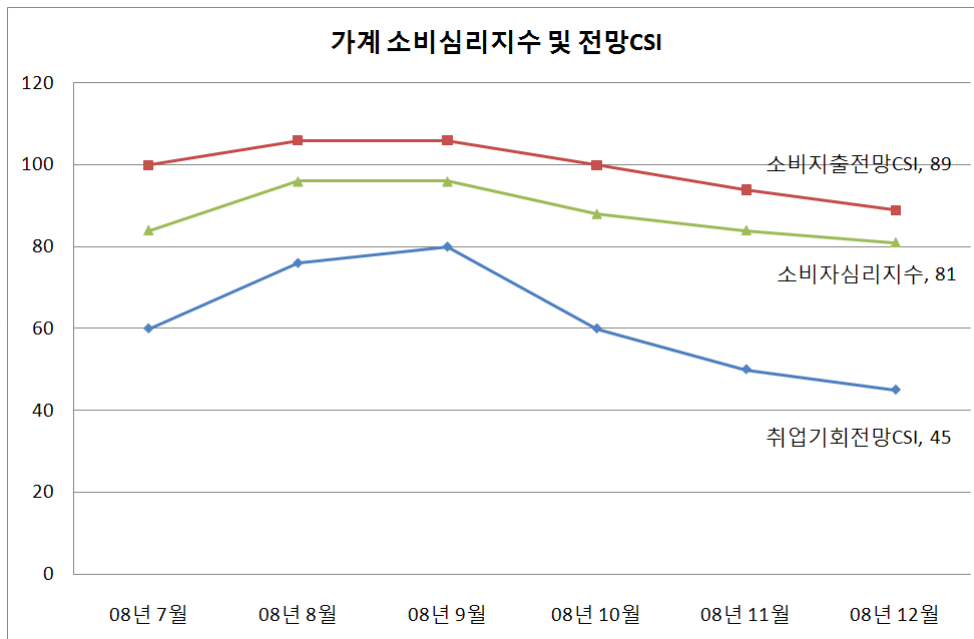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08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투자와 제조업(광공업) 생산활동의 하락 속도는 소비재 판매나 서비스업 생산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설비투자(-18퍼센트), 중화학공업 생산(-15.3퍼센트) 등이 두 자리 수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2.3퍼센트)과 소비재 판매(-2.2퍼센트)도 하락 속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얼어붙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실물경기의 침체와 함께 소비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08년 12월의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또 다시 3p 하락한 81을 기록했다. 9월 이후 연속 4개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분명해진 뒤부터 소비심리도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전망CSI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기회전망의 하락속도가 빠르다. 고용사정이 올해 2009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DB

대표적인 소비지출지표인 소비재판매지수가 올해 들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이외에도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11월 기계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43.3퍼센트, 건설수주는 -35.4퍼센트 감소했다.

표. 경기 선행지표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퍼센트)

	08년 1월	08년 2월	08년 3월	08년 4월	08년 5월	08년 6월	08년 7월	08년 8월	08년 9월	08년 10월	08년 11월
기계 수주	47.2	8.7	25.5	18.4	5	8.7	22.3	-3.1	-35.8	-35.2	-43.3
건설 수주	-13.1	-6.2	5.3	-2.5	18.8	-23.4	-13	-7.6	-40.4	-23.9	-35.4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DB

2. 2009년 경제 전망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극도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기본 조건으로 했을 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각종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치는 GDP성장률이 1.7~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난 4분기 이후 경기침체 속도와 다가올 고용대란을 감안했을 때 곧 이들 연구소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

(전기대비, %)

	2007	2008					2009e		
		1/4	2/4	3/4	4/4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5.0	0.8 (5.8)	0.8 (4.8)	0.5 (3.8)	-1.6 (0.7)	3.7	0.9 (0.6)	1.3 (3.3)	2.0
민간소비	4.5	0.4 (3.4)	-0.2 (2.3)	0.1 (1.1)	-1.3 (-0.8)	1.5	0.5 (-0.5)	1.1 (2.1)	0.8
건설투자	1.2	-1.4 (-1.1)	-1.0 (-1.2)	0.0 (-1.3)	1.8 (-0.5)	-1.0	0.1 (1.6)	1.6 (3.4)	2.6
설비투자	7.6	-0.4 (1.4)	0.9 (0.7)	2.1 (4.7)	-9.8 (-7.2)	-0.2	0.0 (-8.4)	4.4 (1.1)	-3.8
상품수출	12.0	-1.8 (12.0)	4.3 (12.5)	-1.9 (8.0)	-15.5 (-15.2)	3.6	9.1 (-2.8)	-4.3 (5.7)	1.3

주 : 1) 연간 및 () 안은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출처 :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한국은행의 2009년 경제성장률 2.0퍼센트는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추정에 의하면 GDP성장률은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연간 0.2퍼센트 성장이 예상된다.

표. 새사연 2009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	연간
GDP성장률	-0.7	0.2
민간소비	-1.6	-
건설투자	0.1	-
설비투자	-10.0	-
상품수출	-17.6	-
소비자물가	2.7~3.0	2.5
취업자증가율	0.0	-0.1

소비위축 요인들 장기간 지속

2009년 소비지출 감소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의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호탄을 올린 구조조정이 2009년 상반기 중에 확대되고 기존 취업자들도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자산가격의 급락이 우려된다. 지난해 코스피(KOSPI) 지수는 연초 대비 40퍼센트 감소로 마감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보유 주식가치는 3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연체율의 급상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고용악화와 자산디플레이션이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대로 소비자 가계들은 현재의 소비심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 6개월은 소비심리의 호전이 어려울 것이다.

금융불안 요소 정리

2008년 세계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금융시장의 불안이 2009년에도 여

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는 외환, 주식, 채권시장이 대외여건에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현재 국내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소는 첫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둘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셋째 건설업 PF 대출의 부실화, 넷째 제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먼저 원화 환율은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더니 4분기에는 달러당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09년에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원화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전히 자본수지의 순수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파생상품의 불안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점이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은 현재의 하락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는 반전될 수 있을 것 인지가 관건이다. 가계의 소득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부담 비율의 상승,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산 조정 등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건설업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건설사 구조조정의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의 경기하강을 막고자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신용경색 해소와 우량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촉진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넷째, 2008년 한해 국내은행은 대내외 금융불안의 와중에도 총자산이 무려 18.8퍼센트(205조 원, 일반은행 1~9월 기준) 증가했다. 총자산 항목 중에서 기타자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선물환을 비롯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예금자산이 아니라 기타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익성은 올해 크게 악화될 것이다.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단지 문헌과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70년 전의 경험은 두 가지 지점에서 현재와 닮아 있다. 첫째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위기가 ‘금융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동일한 경로를 따르게 된다면, 신용경색과 증권시장 패닉으로

전면화 한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와 상호 작용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이로써 세계경제는 금융, 외환, 실물, 고용 등 경제 전 분야의 총체적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경제침체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그 폭과 깊이에는 다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경기침체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없다. 총체적 충격의 시기에는 비상(非常)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탓이다.

이 시기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경기부양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책적 목표를 경제지표의 양적인 호전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질적인 확충에 두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GDP를 비롯해, 투자-생산-소비-고용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상호 정(+)의 영향을 주면서 상승 또는 완충 관계를 형성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흑한기에는 국지적인 경기부양의 열기가 다른 부문으로 전달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에 매달리는 경기부양책보다는 교육, 의료, 사회인프라, 연금의 질적인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9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총수요의 확대에 이어지지 않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길이다. 정부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하거나 정부정책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을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나 소비세 감면을 통해 이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와 세금 감면이 몇 퍼센트 늘어날다고 해서 누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겠는가?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출이 고용 유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의 전과 루트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금융·자본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실물경제에 걸친 복합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환율, 이자율, 정부지출, 자산가격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이 여전히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기대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제도의 강화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만 투입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소득수준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통상적인 U자 형의 완만한 회복국면이 아니라 L자형 장기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1년 이내에 경기회복에 돌입했던 경기사이클의 전례가 깨져 버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려 2009년 하반기 이전에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무모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새시연
saesayon.org

미국경제 회복의 장애요인과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

2009.1.12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부동산 및 고용 상황
2. 경기회복의 장애 요인들
3. 미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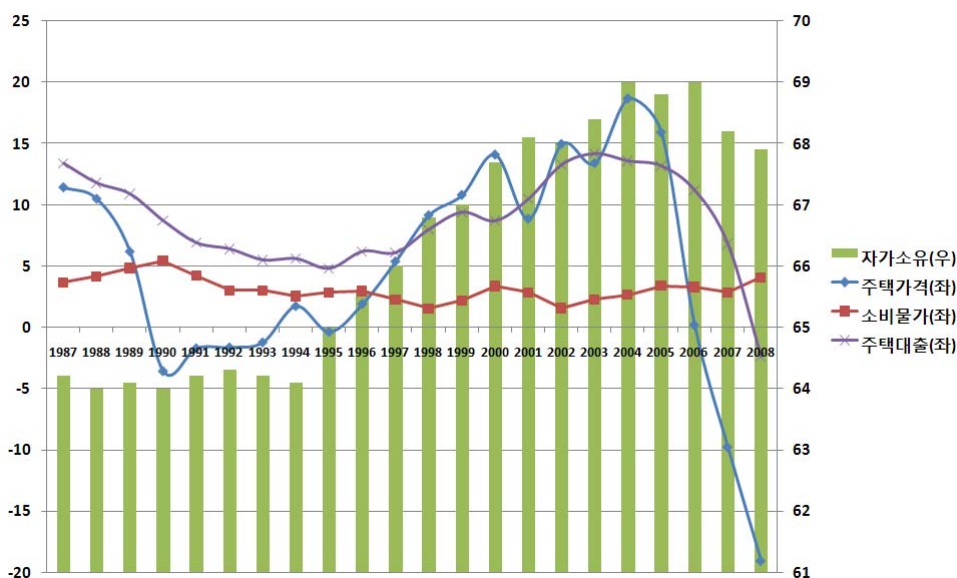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1. 부동산 및 고용 상황

부동산, 고용시장 갈수록 침체

주지하듯, 금융위기를 촉발한 계기는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다.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이를 담보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그리고 이를 또 다시 파생시킨 여러 파생채권(CDO, ABCP, CDS 등)의 기초자산이 된다. 또한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32퍼센트를 차지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형태의 소비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가계의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연도별 주택가격 상승률



현재 주택가격은 20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고점대비 23.7퍼센트(25.3퍼센트, 10개 대도시) 하락한 상태로, 작년에만 18퍼센트(19퍼센트, 10개) 하락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2008년 1분기 6.2퍼센트, 2분기 3.8퍼센트로 하락세가 줄어들어는 듯 했으나, 3분기 4퍼센트로 하락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10월에만 2퍼센트 폭락하였고, 이후 경기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4분기는 3분기보다 하락폭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측면을 보면, 연평균 13~4퍼센트(2002~2006년) 수준으로 상승하던 주택담보대출은 3사분기 -2.4퍼센트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주택 채고 또한 420만 채(11.2개월 분)로 시장 안정에 필요한 7~8개월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보건대 아직까지 회복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12월 실업률 7.2퍼센트... 대공황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

표. 주요 고용 지표 (단위: 만 명)

구분	2007.12	8	9	10	11	12	변화량
경제활동인구	15,384	15,482	15,462	15,488	15,462	15,445	+61
비경제활동인구	7,932	7,928	7,974	7,973	8,021	8,059	+127
취업자	14,629	14,527	14,503	14,466	14,414	14,334	-295
(고용률)	(62.7)	(62.1)	(61.9)	(61.7)	(61.4)	(61.0)	(-1.7)
비농업취업자	13,808	13,742	13,702	13,660	13,601	13,549	-259
시간제취업자	2,470	2,565	2,541	2,545	2,558	2,625	+155

*자료: 미 노동부(계절조정)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의 상황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8,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취업자는 지난 1년 동안 295만 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6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무려 260만 개가 줄어들었다.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을 고려하면 연간 15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일자리가 증가한 경험(2006년 230만↑, 2007년 130만↑)에 비추어 지난해 26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고용시장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전체 감소분의 60퍼센트인 160만 개가 감소해 고용시장 악화를 주도했고 하락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분기별 일자리 감소 추세를 보면, 상반기에는 월평균 7만 6,000개가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20만 개, 그리고 4분기에는 51만 개가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주요 실업 지표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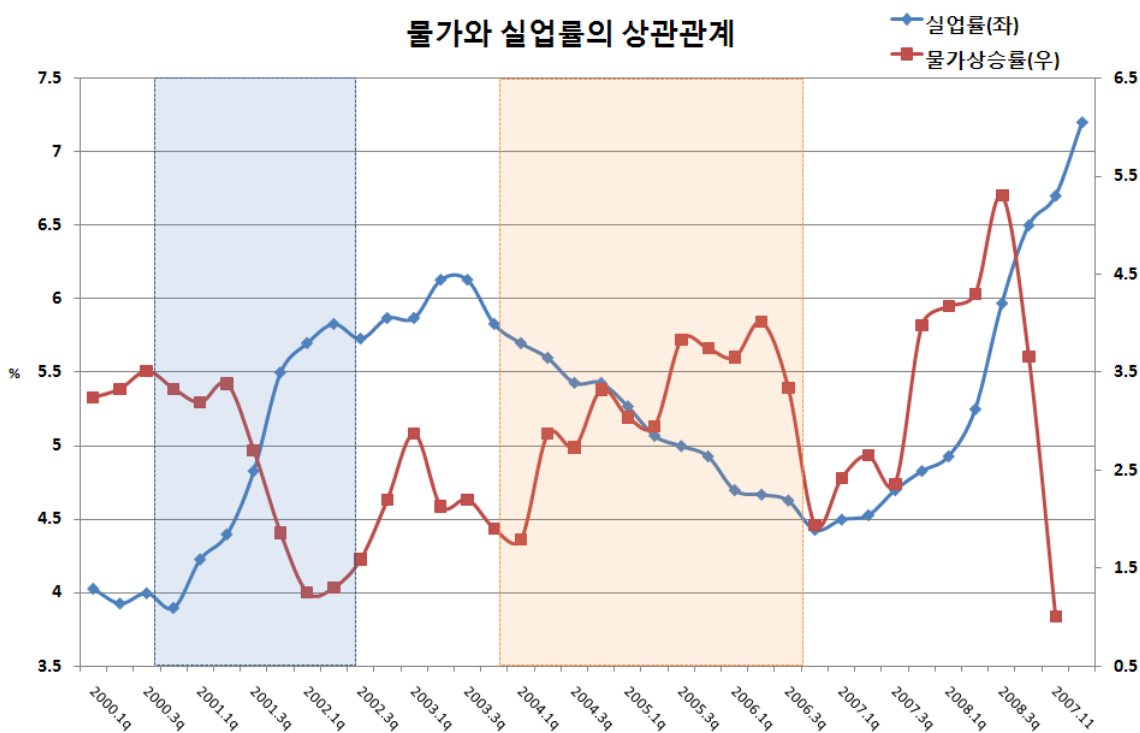
구분	2007.12	8	9	10	11	12	연간변화량
실업자	754	955	959	1,022	1,048	1,111	+357
(실업률)	(4.9)	(6.2)	(6.2)	(6.6)	(6.8)	(7.2)	(+2.3)
장기실업자	132	188	204	228	221	259	+127
(비율)	(17.5)	(19.6)	(21.2)	(22.1)	(21.3)	(23.2)	(+5.7)
실질실업률	8.7	10.9	11.2	12.0	12.6	13.5	+4.8

자료: 미 노동부(계절조정)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업자는 올해 357만 명이 증가하여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3퍼센트 상승하여 7.2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라고 하는 80년대 초반(10.8퍼센트)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년 동안 130만 명이 늘어 26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고용시장 악화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3.5퍼센트까지 상승하였다. 일자리가 필요한 2,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제취업자가 2,60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해고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용시장 악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다.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가 대공황이후 최대 폭인 전월대비 1퍼센트 하락했다. 11월에는 이보다 더 큰 폭인 1.7퍼센트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소비자 입장에서 물가의 안정적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자산 디플레와 유효수요 침체로 발생한 급격한 물가하락은 구조적인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물가하락은 명목부채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능력이 줄어들어 투자의 실질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와 투자의 하락을 초래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다시 유효수요와 물가하락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전쟁과 투기 등의 요인으로 유가폭등이 재현되지 않는 한, 실업률은 상승하고 물

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기침체는 구조적으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 경기회복의 장애 요인들

새로운 수익 모델의 부재

미국 경기회복에 가장 큰 장애는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금융업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미국경제에서 금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퍼센트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성장을 기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30퍼센트로 매우 높다. 또한 금융은 투자와 소비의 매개가 되는 신용창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의 중추적인 부분이다.

현재 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서브프라임과 Alt-A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를 담보로 발행한 MBS, CDO, ABCP 등 부동산 파생시장 또한 사실상 폐쇄되었다. 이들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챙겼던 구조화투자회사(SIV), 투자은행의 각종 유동화전문회사(Conduit) 등은 파산하거나 모회사에 통합되는 등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아울러 채권거래의 보증에 이용된 CDS 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채권보증업체, 보험회사, 그리고 파생상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했던 헤지펀드, 연기금 등 수많은 금융기관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의 부동산 ‘증권화’ 과정에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신용과 자본 손실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경기회복의 근본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초 나스닥 버블이 발생하기 전,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MBS, CDO, CDS 등은 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각각 개발되기 시작했다. 유동화 전문기관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 부동산 호황으로 급성장했다.

요약하면 과거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직접 위험을 관리하던 금융 중개 모형에서, 위험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수수료를 챙겨먹는 증권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정점에서 부동산 버블은 터졌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회복,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개발, 그리고 제도적 규제와 감독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전쟁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버블을 만들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금융 이외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구조적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장, 산업, 상품이 끊임 없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경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산업 부문이 다른 새로운 수익모델을 얼마나 빨리 찾고 개발하느냐가 회복속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세계적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처로서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을 비롯한 수출주도 국가들의 달러 축적 심화가 놓여있다. 다시 말해 수출주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달러를 축적하였고, 미국 채 매입을 통해 달러 가치를 유지하여 미국경제의 소비-버블성장을 지탱해주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는 더욱 확대되는데 여기에는 달러가치 상승이 큰 몫을 담당했다. 개별국가의 환율이 평가 절하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불공평한 국제 금융질서 속에서 금융 불안정성과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 속에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거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다. 비록 달러가치가 2001년 이후 하락했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에 연동되는 탓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럽의 대중 무역적자도 더욱 확대되었다. 독일과 일본 또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에 집중하여, 독일은 2007년 GDP의 6퍼센트인 1980억 달러, 일본은 GDP의 4.7퍼센트인 2,07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초,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어 세계경제는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지만, 2003년 이후 다시 호황을 맞이한다. 세계경제 호황은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금리를 1퍼센트까지 낮춘 통화정책,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자유치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채를 비롯한 금융자산에 투자했고, 미국의 금융기관은 이를 다시 신흥국가들에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용하였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또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굳이 달러 평가절하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이전이나 직접투자를 통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불균형은 미국의 가계가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 즉 차입을 통한 적자지출로 가능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을 극복하고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계가 부채조정을 겪는 동안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수출수요가 늘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수요 침체는 글로벌 수출수요를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국내 수요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또 다시 미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수출수요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장애, 재정 및 통화정책

현재 미국의 금리는 제로까지 낮춘 상태로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즉 단기 국공채 매입에 그치지 않고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조차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기 국채까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9,200억 달러에서 최근 2.26조 달러로, 1년 사이 무려 1.34조의 자산이 늘어났다. 자본금 420억 달러의 53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자산 또한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결국에는 달러가치 폭락과 부실 위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달러의 평가절하나 세계경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하여 고정환율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 때문에 용이하지가 없다. 그렇다고 불공평한 세계 금융질서 아래에서 중국이 환율 및 수출주도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대외비중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유효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세계경제를 추동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재정지출과 수출확대 정책 사이에는 환율을 매개로 미국경제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러가치 유지가 필요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러의 평가절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에서 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금융권 및 자동차 산업

의 구제금융에서 보았듯이, 공화당은 새로운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집행까지 사사건건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시장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재정지출 확대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등장한 정부가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면 재선에 어김없이 성공하는 미국의 정치현실과도 관련된다.

최근 보도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화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도한 재정정책의 효과 또한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감세는 경기침체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세는 경기호황기에 경기를 더욱 자극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감세란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경기침체에 불확실성 해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은 민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실업보험,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을 목표로 직접 지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GDP의 1퍼센트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실시했지만, 실제 감세의 2~30퍼센트만이 소비로 지출되고 대부분 저축 혹은 부채상환에 사용된 점도 감세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부동산 및 금융시장 회복

앞서 말했듯이 미국경제 회복의 바로미터는 부동산시장이다.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및 가계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06년 중반부터 떨어져 고점대비 23.7퍼센트 하락했다. 2004년 3월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버블 이전 2000년 초에 비해 여전히 57퍼센트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후반에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2000~2008년, 소비자물가는 누적으로 28퍼센트 상승하였다. 통상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1퍼센트 정도 더 상승하는 것이 역사적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소한 20퍼센트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RM 금리 조정기간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전체 주택대출 중 연체율은 7퍼센트, 압류과정에 있는 부동산은 2.97퍼센트에 달한다. 전체 모기지의 10퍼센트 가량이 연체 혹은 압류과정에 있다는 말이다. 매일 3,100건의 주택이 신규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25퍼센트 정도 할인되므로 가

격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또한 복잡한 증권화 과정과 재고누적으로 인해 압류자산의 처분에 시간이 소요되며, 고정자산이라는 특성상 상당한 재고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조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금융시장을 보면 최근 TED 스프레드(유러달러금리-국채금리)가 2퍼센트p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신용경색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이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이 8,200억 달러나 증가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한 유동성 공급이 다시 중앙은행 장부로 예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새로운 수익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상품의 규모, 주체 및 거래 상대방의 복잡성, 불투명성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상태이며, 한 쪽에서 지뢰가 터지면 사방에서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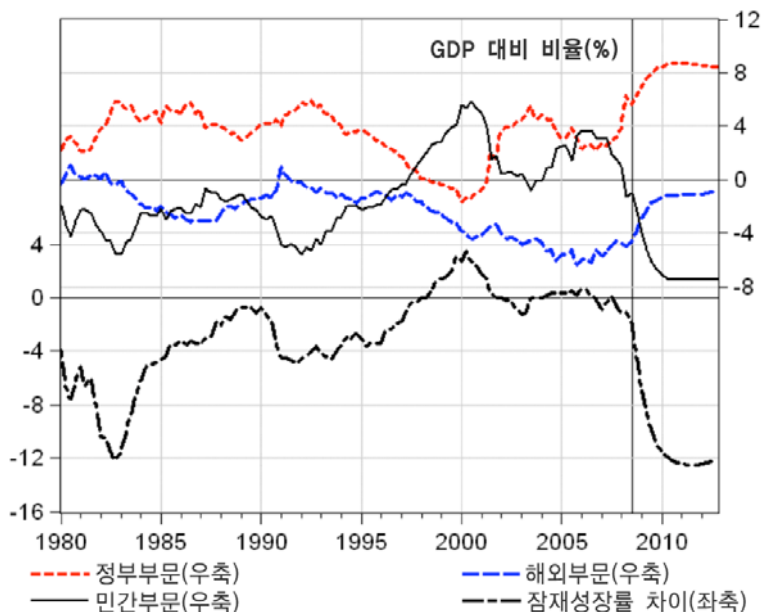
3. 미국경제 전망

회복해도 기술적 반등 수준

다음 그림은 1980년 이후 미국경제의 3대 축인, 해외, 정부, 민간지출의 GDP대비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¹⁾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요 성장 동력은 민간지출이었으며, 2000년 경기 침체는 재정지출 확대에 극복되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7년 기준, 미국의 가계부채(14.38조 달러)는 연간 GDP의 100퍼센트, 가처분소득(10.35조 달러)의 139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1990년 가처분소득대비 58퍼센트 수준이던 가계의 주택대출 잔액은 2007년 말 103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했고, 1990년 7퍼센트 수준이던 민간저축률은 2007년 0.4퍼센트로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계가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1) Godley 외(2008), Prospects for the US and the World.



지난 12월에 발표된 중앙은행의 자금순환표(Flow of fund account)를 살펴 보면, 가계의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 3분기에만 전체 순자산의 5퍼센트인 2.8조 달러가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순자산의 11퍼센트인 무려 7조 달러가 금융위기로 사라져 버렸다. 부동산 가치가 2조 달러 하락했고, 금융자산 가치가 4.8조 달러 하락하여 자산 부문에서 6.67조 달러가 사라지고 부채가 0.4조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가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또한 3,600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 하락을 보였다.

표. 미 가계의 대차대조표 변화 (단위: 조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3	2008.3	변화량
자산총액	56.56	63.15	69.56	75.04	77.78	71.11	-6.67
부동산	17.59	20.19	23.18	23.95	23.44	21.43	-2.01
금융자산	35.40	39.19	42.44	46.98	50.1	45.27	-4.83
부채총액	9.86	11.03	12.18	13.45	14.14	14.57	+0.43
주택대출	6.88	7.83	8.87	9.86	10.41	10.57	+0.16
순자산	46.7	52.12	57.38	61.59	63.63	56.53	-7.1
가처분소득	8.16	8.68	9.06	9.64	10.22	10.68	+0.46

*자료: FRB

이에 따라 가계의 모기지 차입이 2사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3분기에는 2.4퍼센트의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자신용 또한 1.2퍼센트 증가하는데 그

채 가계차입은 전체적으로 0.8퍼센트 하락하였다. 이러한 가계의 부채조정은 버블이 발생하기 전인 2000년 수준(가계부채/가처분소득, 95퍼센트)에 근접하는,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소비가 성장률에 공헌하는 비중은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3사분기에 민간소비가 3.8퍼센트 하락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소비침체는 고용 사정 악화, 차입 축소, 자산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과 정부지출 확대가 이를 대체해야만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표. 총수요 각 부문의 성장 기여도1) (단위 : 퍼센트)

구분	2005	2006	2007	2007.4	2008.1	2008.2	2008.3	
GDP 성장률	2.9	2.8	2.0	-0.2	0.9	2.8	-0.5	
소비증가율	3.0	3.0	2.8	1.0	0.9	1.2	-3.8	
성장 기여도	소비	2.13	2.13	1.95	0.67	0.61	0.87	-2.75
	투자	0.95	0.35	-0.9	-1.93	-0.89	-1.74	0.06
기여도	수출	-0.21	-0.02	0.58	0.94	0.77	2.93	1.05
	정부지출	0.07	0.32	0.4	0.16	0.38	0.78	1.14

*자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1) 연율로 환산한 전분기 대비 성장률

미국경제는 통상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비상국면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GDP의 4.5~5.5퍼센트인 6~8,000억 달러 규모(감세 3,000억 포함)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2년에 걸쳐 단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GDP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의미하며,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유로 쉽게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지출 자체로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도 없다.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국내수요 창출은 오히려 일시적 반등에 머물고 미국의 경상수지를 더욱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향후 미국경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경제가 2010년 중반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통상 고용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가 공식 종결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중반에 실업률은 10%까지 오르고, 고용시장은 최소 2011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음으로, 달러자산의 수익률 기대가 급격히 붕괴되어 달러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어 장기침체로 들어서는 경우다. 이 경우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대인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협조와 신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 하반기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다. 새로운 행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를 심어주면, 케인즈가 말한 경제의 3대 ‘심리법칙’이 살아날 수도 있다. 즉 가계의 ‘소비성향’이 회복되고, ‘기업가정신(동물적 본능)’이 살아나 투자가 회복되고, ‘유동성 선호’가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회복되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만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출주도 정책에서 국내 유효수요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금융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 금융, 무역 질서와 제도들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쉽게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불균형 지속의 근원인 ‘달러체제’는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반이명박 연대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전략

2009.1.14 | 엄관용_새사연 객원연구원

목 차

1.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을 막아낸 촛불혁명
2. 2009년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재보권 선거
3. 수평적 반이명박 연대를 모색해야
4. 국민의 저항에 대해 제도정치가 답해야 할 때



<http://saesayon.org>

87년 민주화 이후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완만하게 진행된 민주주의 공고화가 2008년 이명박 정권 집권 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후퇴하는 적신호가 여러 방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방식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적 저항이 발발하기도 했으나, 2008년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심의 이반 현상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2008년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는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으로 분출되었다.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의 직접행동 민주주의와 다방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의지가 현재의 대의정치 시스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후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 보수 혁명으로 귀결되는 듯했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범보수세력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의회의석 20석을 장악하면서 제도정치적 수준에서 범보수세력의 각종 정책들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주화 이후 반복된 여소야대 분점정부 상황은 통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판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는 안전판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제 18대 총선 결과 범보수세력에 의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제도정치의 지형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역방송 장악, 학원 자율화,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추진, 공공부문 사유화, 대운하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들이 발 빠르게, 그러나 어떠한 제약도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을 막아낸 촛불혁명

그러나 제도정치 수준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집권 극초반부에 추진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중학교 여학생들로부터 촉발된 촛불집회가 단기간에 87년 6월항쟁의 동력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2008년은 죽지 못해 사는 절망의 시간이었으나 촛불은 그나마 삶의 빛을 뿌려주는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만약 2008년 5~7월 동안 지속되었던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연초까지 진행되었던 국회 입법전쟁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절대 다수의 한나라당에 맞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강한 민주적 의식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큼 대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보수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한 가장 직접적 원인은 집권세력의 무능함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의 한계까지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명박 정권이 집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혼동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일거에 총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고 협상과 타협의 기술을 발휘했다면, 만약 이명박 정권이 외형적으로나마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더라면, 만약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수준의 좀 더 부드러운(?) 신자유주의 정책을 느긋하게 추진했다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단언컨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 엘리트 집단과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정운영의 기술이나 정치적 기예라는 측면에서 수권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집권 초반기를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들이 사실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는 미네르바 현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준비 되지 않은 대통령과 무능한 집권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그 동안 크게 성숙한 국민의 민주적 의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의 향후 정국 운영 스타일에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차적으로는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반(反)이명박 연대의 핵심축이 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선별적 공격, 입법전쟁 이후 동등한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발언 등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2009년이 2008년의 암울한 연장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09년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재보권 선거

2009년 정치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략 8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이자, 선행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다. 4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행변수는 지난 1년 간 이명박 정권의 실정, 연초연말에 진행되었던 1차 입법전쟁과 2월에 재연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입법전쟁, 2008년 촛불집회와 2009년 2월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촛불집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행보 그리고 경제상황 등이다. 어느 변수 하나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소수파로서 어렵게 우위를 지켜온 잠재적인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이명박 정권의 정국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고, 이어질 2차 촛불집회를 비롯한 국민적 저항운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실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야당이 한나라당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고정 지지율은 여전히 3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잠식할 경우 민주당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매우 어렵다. 근래에 반이명박 전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단순히 사회운동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 나아가 2010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주장은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

수평적 반이명박 연대를 모색해야

진보세력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진보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그들이 속한 정당을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

의 세력이라면서 비판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무능력하며 과시증적 행태마저 보이는 한나라당과 대적하기 위해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암묵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연대는 사회운동적 수준에서의 연대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론’을 연상시키는 당면한 선거 국면에서의 연대를 말한다. 과거 비판적 지지론을 둘러싼 진보세력 내의 첨예한 갈등이 재생산되고 자칫 두 동강 난 진보세력의 역량이 더욱 축소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반이명박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거의 비판적 지지론은 진보세력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방적인 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연대는 동등한 정당 간의 수평적 연대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있고, 그 후보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가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단일 후보를 출마시켜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객관적인 조건상 선거 패배가 확실한 한나라당이 선거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활하는 것을 막아 내야 한다. 이는 무원칙한 선거연합이 아니라 각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며,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적어도 선거정치를 둘러싼 반이명박 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필요가 있고, 그 연대가 잠정 중단되는 시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각종 악법과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을 민주적 압력에 밀려 포기할 때다. 나아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자신들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본적 오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대안적인 사회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반이명박 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연대로 확장·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저항에 대해 제도정치가 답해야 할 때

반이명박 연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한 민주당인 한 그 책임의 깊이는 두말할 나위 없다. 거두절미하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를 먼저 양보하고, 적

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석 1~2석을 추가로 욕심낼 경우에는 한나라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이고, 1~2석을 과감히 포기할 경우에는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국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2009년의 정치 일정에서 4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만연된 선거정치에 대한 불안감과 냉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 집회를 비롯한 국민들과 시민사회세력의 운동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탄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08년 제도정치의 암울한 상황을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투입되어 구원해 줬으니, 이제 제도정치가 다소 잠잠해진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이다. 제도의 정치가 운동의 정치와 선순환 관계를 맺을 때 2009년 한국정치는 2008년의 암울한 연장에 단절선을 그을 수 있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2009.1.15 | 윤지훈_새사연 운영위원/(주)EJ컨설팅 이사

목 차

1. '조정'과 '파산'의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남북관계
2. 2009년 북한의 선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자원 총동원령
3. 2012년에 맞춰진 북한식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행
4. 통미통중(通美通中)과 무한무일(無韓無日)
5. 파워엘리트의 세대교체
6. 2009년 남이나 북이나 경제에 올인 하는데...



<http://saesayon.org>

‘조정’과 ‘파산’의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남북관계

2008년 세밑, 남북관계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조출한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여 한 자리에 모였다. 통일부 출입기자, 연구자, 남북경협 기업 임원,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던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야기의 주제와 오가는 정보들이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2008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술잔이 한 순배 돌고나니 참석자들은 저마다 MB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인식에 대해 우려하며 2009년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남북관계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남북관계의 체감온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YS 정부에서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9년 상반기에 MB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YS 정부 때보다 더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 당국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2008년 남북관계는 합창의장의 북핵 선제타격 발언과 통일부 장관의 지난 10년 반성 발언으로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후 남한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비난하였고, 북한은 남측의 대북 삐라 살포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제기 등을 문제 삼아 격렬히 반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일부는 2008년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10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조정기”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노동신문과 대남 기관을 동원하여 남북관계가 “파산”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나의 현상을 대하는 남과 북의 온도차가 너무 큰 대목이다. 시각의 차이야 어찌되었든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전면 중단되었고, 남북 상생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위태롭다. 백두산 관광까지 합의하였던 남과 북은 그나마 열려 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문마저 닫아 버렸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10여 년 이상 지원했던 식량은 단 한 톨도 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뽕뽕 얼어붙은 한국의 경제상황 만큼이나 남북관계도 극도의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선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자원 총동원령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지난해를 평가하고, 올 한해의 총적 과업을 제시하는 신년공동사설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라는 3대 기관지의 공동 명의로 발표하였다.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신년공동사설은 북한 대내외 정책의 총적 방향과 과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우리 신문과 방송 등에서도 연초가 되면 북한 전문가들을 동원해 공동사설을 분석하는 것이 연례화 돼왔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주목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 규정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내부 자원 총동원령이 선포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김정일 위원장 탄생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2007년 전국지식인대회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북한식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에서의 강국을 이뤘고, 핵 보유로 군사에서의 강국을 실현했다고 자평하며, 이제 경제에서의 강국을 이루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을 맞은 2008년이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고난의 행군 이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교양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가용할 수 있는 내부 자원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기초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군중 운동과 수행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김정일 위원장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를 과거 1956년 12월 김일성 주석의 강선제강소 방문과 비교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돌파구를 열었던 천리마 대고조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창출해 제2의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형 군중운동으로 북한 경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로 군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에서 군이 사회적 선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위상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군대를 앞세우는 선

군(先軍)의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급을 ‘대고조 역사의 주인공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로 규정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맞춰진 북한식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행

둘째,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정상화’, ‘생산의 정상화와 현대화의 결합’ 등의 표현은 과학기술을 통한 단번 도약, 생산 현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정상적 생산 시스템 마련으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거나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준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8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시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행부문으로 강조되던 금속공업을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로 내세운 것은 전체 경제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철강생산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전체 경제의 활력을 마련하겠다는 북한 경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초고전력 전기로를,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대형 산소분리기를 잇따라 건설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 광물자원 확보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5년 통화철강그룹 등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총 매장량 30억 톤의 함경북도 무산철광에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50년 동안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반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전기, 기계설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린성과 산둥성의 2개 기업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혜산청년동광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비철금속 전문 우광집단은 용등탄광에 대한 시굴권을 확보하고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2008년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방북 이후 올해를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대규모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교차 방문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두 국가 수반의 교차 방문이 현실화 된다면 북중 간 대규모 경제프로젝트(일각에서 발전소와 제강을 포함한 종합 제철소 건설이라는 설이 있다)는 현실화 될 것이며 북한 경제의 취약점인 인프라 건설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실의 절박한 요구’,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 등의 표현은 남쪽의 지원이 중단된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여준다. 인민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 문제의 해결 없이는 강성대국의 꿈도 허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약 430~48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약 51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는 식량농업기구(FAO)의 기준에 약 30~80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북한은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의 군중적 운동을 통한 생산성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로 식량 지원에 나선 미국과 국제기구의 도움, 그리고 전통적 동맹관계인 중국의 원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NGO기구의 한 인사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은 옛 소련 지역의 중앙아시아 등지에 북한의 대규모 노동력을 파견하여 해외 식량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남측의 지원이 없으면 춘궁기를 버틸 수 없어 남쪽에 손을 벌릴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예상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내용은 평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독려다. ‘도시경영사업에서의 혁명’을 강조한 평양 현대화 계획은 2007년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었다.

작년 9월 필자는 평양을 방문해서 살림집 개보수와 105층 류경호텔의 리모델링 그리고 전차 궤도 정비 사업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경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한 인사는 “대동강변 1킬로미터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조성 공사, 평양 순안공항 현대화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을 열거하며, 평양의 개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평양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서방 자본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와 본격적인 교류를 앞두고 관문인 평양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통미통중(通美通中)과 무한무일(無韓無日)

마지막으로 이번 신년공동사설에 주목할 점은 대남, 대외관계의 북한 입장을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 통일의 표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은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김정일 시대의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표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6자회담 지속과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 북한이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미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국들에게 공표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리고 정상적인 북미관계 수립 없이 강성대국 실현이라는 북한의 목표는 제약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북한이 정상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은 통 큰 주고 받기식 협상으로 북미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상무장관 지명에서 사퇴한 빌리 처드슨 주지사, 커트 캠벨 신임 동아태차관보, 웬디 서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프랭크 자누지 오바마 캠프 한반도 정책 팀장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 인사들은 오바마 집권 1기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과 직간접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집권 초기부터 북미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과감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브레인들은 체육과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고위급 특사 파견과 연락사무소 개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과 납치문제에 사로잡혀 6자회담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한이 통미통중(通美通中)하는, 남쪽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파워엘리트의 세대교체

전반적으로 2009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실천 과제들을 구체화 하고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행동전을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 및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화두가 된 북한의 후계 체제 또한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작년 9월 북한 정권 60주년 행사에 김정일 위원장의 불참으로 증폭된 건강이상설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에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이 빈번히 등장하며 수그러들고 있다. 특히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3일 “국제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한 미국인이 작년 10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반신불수설’, ‘사망설’ 등 김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의 김위원장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도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이른바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 전력, 철도, 석탄 가운데 석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상(장관)들이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젊은 세대로 교체되었고, 무역, 농업, 임업성 등의 상(장관)들도 바뀐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세대교체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분야에서는 그동안 당국, 민간교류, 경제교류 분야에서 활약하며 남쪽에 많이 알려진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정운업 민경협 회장 등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부서 개편과 후임자 인선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신임 대남 사업 담당자들은 전임자들에 비해 원칙적이고 신중한 인물들으로써, 남쪽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풀어나가기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009년 남이나 북이나 경제에 올인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연말연초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와 2009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해 국정운영 방향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 살리기’로 표현되는 이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집념이 묻어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근시안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북한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2009년 남과 북의 신년사의 주된 화두는 경제였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과 북의 목표와 주장이 분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도, 남한의 경제위기 극복도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입으로 많은 돈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남한이 매장량 가치 3,700조에 달하는 북한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문제, 철의 실크로드를 비롯한 물류시스템 정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 북의 기초과학과 남의 응용과학의 시너지 효과, 북의 고려의학과 남의 서양의학의 협업, IT기술 분야의 교류, 문화 콘텐츠 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DMZ를 활용한 평화생태관광 사업 등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세계 경제위기 속에 남북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이는 남한이 이야기 하는 상생과 공영이요, 북한이 이야기 하는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과 비핵화에 맞춰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미 눈치 빠른 EU, 중동 자본들은 북한을 주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자원은 유한하고 시간은 제약되어 있다.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로 진정한 남과 북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독선적 아집을 버리고 우물 안에서 나와야 한다. 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남북문제를 대하지 말고 무늬만 실용인 허황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지지층 결집 등 정치 공학적 사고와 기독교 근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남북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칠천만 민족의 상생공영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이명박이다.



'죄수 딜레마'에 갇힌 한국교육의 3대 쟁점

2009.1.16 | 최민선_새사연 연구원 | humanelife@saesayon.org

목 차

1.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진 한국교육
2. MB, 국민적 반대여론 무시한 교육정책 강행
3. 극심한 경기 불황 속 유일한 상승세, 사교육비
4. 2009년 예정된 것들
5. '교육대란'이 불러올 국민적 저항 예고



<http://saesayon.org>

‘죄수의 딜레마’. 이 유명한 게임이론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귀결됨을 설명한다. 가령, 현장에서 함께 잡힌 두 명의 죄수가 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두 죄수에게 말한다. “자백하라. 만약 너 혼자 자백하면 수사에 협조한 것을 정상 참작해서 3년형을 살게 해 주겠다. 하지만 넌 입을 다물고 상대방이 모두 자백한다면 너 혼자 20년형을 살게 될 것이다.” 그간의 판례상, 두 죄인이 모두 입을 다문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각각 5년형을 살고, 둘 다 자백을 하면 10년형을 살게 된다.

죄수는 고민에 빠진다.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에 둘 다 5년형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은 자신만 자백을 하지 않아 20년형을 살게 되는 것, 그 다음이 둘 다 자백을 해서 10년형을 사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먼저 자백해서 3년형을 사는 것이다. 어쨌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백’인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두 죄수는 자백을 해 10년형을 받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진 한국교육

현재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있다. 모두가 경쟁하지 않고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면 행복하겠지만,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보다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남과 똑같이 받는 공교육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기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비용에 따라 질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사교육이 순위를 결정하기에 이제는 학력이 아닌 재력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승자는 진정 행복한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 정의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교육적 관점으로도 과연 그러할까. ‘나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인가’에 주목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억압과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교육시스템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아닌 ‘경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는 물론 전인적 성장까지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MB, 국민적 반대여론 무시한 교육정책 강행

이러한 현실에서 경쟁을 교육문제 해소의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한국교육은 ‘딜레마’를 넘어 ‘위기’에 봉착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의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건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졌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발표하는 정책마다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영어몰입교육 실시 발표는 ‘오웬귀 파동’을 일으켰고, 0교시, 우열반,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규제를 푸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미친 교육’으로 불리며 촛불정국을 만들었으며, 이는 해방 후 최초로 교육학자 110명이 “교육철학이 부재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이 국가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보는 계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입시 부활’을 우려한 지역주민과 교육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국제중 설립을 강행했고,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공립고 82개, 마이스터고 9개를 지정·고시했다.

또한 정부는 일제고사, 학교정보 공개, 학교선택제 등 학생들을 성적으로 한 줄 세우고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일사천리로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일제고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을 거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7명에게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아직도 교육청 앞에는 촛불이 사그라들 줄 모른다.

극심한 경기 불황 속 유일한 상승세, 사교육비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위주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급증으로 귀결됐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액이 2007년에는 평균 17만 원을 웃돌았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1, 2분기 각각 19만 원, 20만 원 선을 넘겨 3분기에는 약 22만 원 고지마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23 퍼센트나 늘어난 수치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던 지난해, 각 가계의 소비지출은 4.7퍼센트에 그쳤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예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이 기이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새 정부의 달라진 교육정책이 학부모와 학생의 생존본능을 자극한 탓이다. 강화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사교육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정도는 서울지방통계청의 서울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5~7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30대 이상 가구 가운데 80.4퍼센트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교육비 중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사교육비’라는 답이 77.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지난 2000년, 2004년에는 60퍼센트대였으나 2008년에는 77.5퍼센트로 대폭 늘어나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한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잘 보여준다.

2009년 예정된 것들

그렇다면 올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은 무엇일까. 지난 촛불정국에서 유명세를 탄 ‘MB,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마!’라는 피켓 문구처럼 앞으로 펼쳐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 자사고 등 ‘입시명문고’ 설립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우선,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사안은 다양한 ‘입시명문고’ 설립으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과 학교서열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에는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숙형 고교는 142교, 마이스터고는 20교로 각각 늘리는 방안 등 고교체제 개편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부터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추진해 온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올해 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 실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

편의 노력보다는 ‘입시명문고’로서의 자리매김에 집중할 우려가 크다.

이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25개의 자치구별로 1곳씩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너무 높아 자사고 설립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국제중 설립 계획을 지난해에 재추진해 결국 개교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역시 이명박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대거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최소 법인 전입금 부담 기준을 등록금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기존의 자사고는 25퍼센트), 학생 납입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2011년까지 100개의 자사고를 설립한다는 목표에만 경도돼 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부실 사학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등록금을 사학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시도교육감의 소관으로 처리하려는 당국의 계획 역시 학비가 비싼 ‘귀족학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 여기서 잠시 상상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자사고, 특목고 등 특수학교는 100개가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까지 300개의 특수학교를 더 만들겠다고 한다. 400개가 넘는 입시명문고가 생기는 것이다. 이들 각 학교의 한해 졸업생 수를 평균 150명이라고 하면 모두 합쳐 약 6만 명.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의 입학정원은 1만 1,256명(2006년)이다. 그나마 정원이 줄어드는 추세로 치면 앞으로 그 이상이 되긴 어렵다.

결국 특수학교의 졸업생 수는 ‘SKY’대 입학정원의 6배에 가깝다. 어렵사리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사교육비를 충분히 지불하고 청춘을 저당 잡혔지만, 그 안에서도 상위 6분의 1 안에 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2011년도부터는 ‘특수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명문대는 꿈도 못 꾸다’는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만연해지면서, 고교 입시를 위한 경쟁으로 초중학교 입시경쟁의 과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3년 뒤에나 닥칠 일이니 아직 한숨 돌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자녀교육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학부모

들과 이들을 부추기는 사교육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학교 설립이 현실로 드러나는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곧 다가올 2월에는 지난해 실시한 일제고사 결과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공개된다. 그러면 시도별, 군구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여기에 언론매체가 결합되면 각 학교의 서열화는 시간문제다. 게다가 올해 말에는 학교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학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각 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명문학교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물 위에 오른 기피학군과 기피학교는 학생 수 감소, 정부지원 축소의 악순환을 겪게 되고 학군·학교 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촉진되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초중학생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팽창 등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의 비극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서울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뜨거운 감자, 3불 정책 폐지 논란

다음으로 올해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대입자율화로 인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폐지의 논란이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학교 설립으로 고교등급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지난해 대교협 관계자들의 ‘3불 폐지’ 발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가 평준화 해체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각계의 분석은 이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로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이며, 3단계로 2012년 이후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전형을 대학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수능 응시과목은 2012학년도부터 선택과목수를 1개 줄였다.

대입전형에 대한 권한이 대학으로 이양되자마자, 한동안 잠잠했던 3불 정책 폐지 주장이 물위로 떠올랐다. 대교협은 지난해 8월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0학년도 입시까지는 3불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2011학년도 이후에는 3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말에는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

장이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실시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3불 정책 무력화를 시사했다. 올해는 1월에 있을 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3불 정책 폐지 여부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이제 3불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명목 하에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을 없애기 위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3불 정책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출신 학교를 따져 입시에 적용하는 고교등급제가 실시되면, 곧 실시될 학교정보 공개, 학교선택제 등과 맞물려 지역과 학교 간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고교서열화가 촉진된다. 특정교과의 고교 교육과정 외의 지식을 묻는 본고사 역시, 80년대 실시됐다가 사교육 급증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 학교 교육과정 과행 운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폐지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활성화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다.

그림. 1985~2005년 GDP 대비 유사 사교육비 추계치의 비중



출처 : 송경원(2008), <지난 20여년 간 사교육비 추이>

그럼에도 수도권 몇몇 상위 대학들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일념 하에 교육의 공공성은 뒤로 한 채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몇몇 대학들을 대변하는 대교협에 대입전형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고려대는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특목고 학생을 우선 선발했고 일부 대학들은 논술시험을 은근슬쩍 본고사 유형으로 바꿔 출제했으나 대교협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학자율화에 따른 입시정책의 변화는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입시의 자율화’만 외치고 영재를 둔재로 만드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개편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진 3불 정책 폐지는 지금까지 35년간 유지해온 평준화를 해체시키고 대학서열화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전교조 죽이기, 보수화의 맥락**

마지막으로 올해 쟁점이 될 이슈로는 교원평가와 ‘전교조 죽이기’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2005년 이래 정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반대여론이 거세 계속 유보됐으나, 올해 정부가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교원평가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교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의 질이 아닌 학생들의 성적 순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보다 교장·교감 등 상급자들이 매기는 점수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쟁이 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학생 성적으로 한줄 세우는 경쟁이 아닌 교사 간 협력적 경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질 높은 교원 양성을 최상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현재의 교원평가안은 또다시 교사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보수단체의 이적단체 시비,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허락한 교사 중징계 등 일련의 ‘전교조 죽이기’ 공세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전교조에 지속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그 근거로는 ‘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해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하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들 수 있다. 교섭사항을 축소시키고 특히, 노조 전임자마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 방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당한 처사다. 새해를 맞이하며 각 보수단체들이 신년인사에서 2009년 공격 대상으로 전교조를 1순위에 올린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보수의 전교조 공격은 미래 비판세력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중학생들의 적극적인 정부 비판 행동에 놀란 정부가 이후 선거를 대비해 그 싹을 자르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교과부가 각계의 반대여론 속에서도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보수인사들을 비싼 강사료를 지불해가며 각 학교에 모셔 현대사 특강을 진행한 것과 같은 정부의 ‘우향우’ 정책의 일환이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 특히, 전교조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반대하며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만들기에 주력하는 전교조는 정부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다. 게다가 일제고사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교사의 파면·해임도 불사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여러모로 정부와 교사들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란’이 불러올 국민적 저항 예고

새로 당선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육이 처해있는 위기를 실감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너진 공교육의 부활이 절실하다”며 부시 행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아동낙오방지법(NCLB)을 수정해 일제고사를 없애고 교장 및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커리큘럼과 평가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Zero to five' 계획을 통해 0~5세 동안의 조기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포했다.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앞장서 이끌어가던 미국이 교육정책에 있어 이와 같이 방향전환을 한 것은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낙

후된 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신년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로써 2009년 올해는 교육대란의 본격화가 예고된다. 성적으로 한줄 세우기 정책과 학교서열화에 고통 받는 학생, 사교육 팽창과 교육 양극화에 자녀 교육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학부모, 본말이 전도된 교육현실에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운 교사,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두 죄수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백을 선택해 10년형을 살게 된다. 개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양한 양질의 사교육에 의한 학벌 상승이라는 현실적 선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 뻔하며, 돌아보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의해 강요된 선택일 뿐이다.

지난해 여중생들이 ‘미친 교육’을 반대하며 일어난 촛불정국으로 정부는 영어몰입교육 계획을 일부 철회했고 0교시, 야간자율학습 실시에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교육대란이 예고되는 2009년 올해, 정부가 이 미친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거리는 또다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촛불로 가득 메워지지 않을까.



MB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009.1.22 | 정연우_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목 차

1. 방통위·KBS 등 장악한 데 이어 본격 구조개편에 나선 MB정권
2. 언론관계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신문사의 방송시장 장악
3. 미디어랩 도입은 시청률 지상주의로 이어질 것
4. MB정권이 꿈꾸는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는
5.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6.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언론에 달렸다



<http://saesayon.org>

모든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을 꺾으려워한다. 다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인 보도를 기대하는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의 차이가 민주적 권력과 독재권력을 가른다. 지난해 이명박정권은 정치권력과 그들의 엄호세력인 이른바 조·중·동을 앞세워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했다. 정치적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정치적 멘토라는 사람을 앉히더니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KBS, YTN 등에 낙하산인사를 내려 보내고 이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거 거리로 내쫓았다.

방통위·KBS 등 장악한 데 이어 본격 구조개편에 나선 MB정권

연초에도 그러한 칼바람이 이어져 권력의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KBS사원 행동 사람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그리고 KBS와 YTN 등을 대상으로 현 체제와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언론장악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은 정권은 올해부터 방송 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편하여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거세하려하고 있다. 언론을 자본이 각축하는 시장의 싸움판으로 몰아넣어 공공적 역할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오로지 산업의 관점으로만 언론을 보면서 온갖 희한한 논리와 과대포장,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사람들이 경제문제에 관심이 높아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적 감시와 비판 그리고 건강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언론 정책에 대한 큰 틀은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계법의 개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영방송법안 등을 통해 MBC 등을 민영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주던 현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정책 추진이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애초에 지난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이른바 입법전쟁, 전광석화, 질풍노도 등의 용어를 써가며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려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리고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자 일단 멈추고 다시 전열을 다듬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법개정을 하겠다고 베풀고 있고 청와대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디어가 최대 산업이고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은 16일 “공영방송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미디어 관련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법을 통해 KBS1·2와 EBS는 공영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언론관계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신문사의 방송시장 장악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한 간부는 지난 20일 “지상파방송과 경쟁을 붙여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종편채널 도입의 목표 중 하나”라며 “경쟁이 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국을 돌며 당원이나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 홍보전을 하면서 2월 입법전쟁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시장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고 방송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산업을 활성화 될 경우 최대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내어 방송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려고도 했다.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을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연구내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공영방송법안이 의도하는 대로라면 KBS2와 MBC는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영방송의 광고 수입을 전체 재원의 20퍼센트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기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맞물릴 경우 필연적으로 방송의 민영화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 재원의 50퍼센트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는 KBS는 민영화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공영방송의 전체 재원 중 광고의 비중을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면 MBC는 민영방송으로 규정될 것이고 이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면서 민영화로 갈 것이 뻔하다. KBS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정도로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재원의 20퍼센트 이하로 광고수입의 비중을 낮추기 어렵다. 따라서 KBS2를 민영화하여 광고재원의 비중을 낮추려는 주장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MBC가 민영화되면 방송시장은 상업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경쟁으로 KBS도 경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두 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편채널은 케이블방송이지만 지상파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 편성할 수 있다. 종편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미디어랩 도입은 시청률 지상주의로 이어질 것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방송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나 대자본 광고주들은 이를 자신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는 자칫 방송사를 시청률 중심의 이윤논리에 함몰되게 하고 상업주의화를 부추겨서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광고주의 영향과 압력을 받을 것이며 언론매

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야기하며, 대기업과 초국적 기업 및 대기업 계열 대행사와 외국계 대행사의 시장지배 확대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디어랩을 통해 방송사 간에 전면적인 가격·비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성의 논리보다는 산업적 논리로 방송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방송사들은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방송을 제작·편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점차 위축 될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방송은 사라질 것이며 방송의 다양성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자극적 내용이나 소재를 중심으로 한 선정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시청률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방송사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크게 제약된다. 광고판매가능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줄어들 것이며 변두리 시간대로 밀려나게 된다. 오락프로그램은 늘어나는 반면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소수자 프로그램은 줄어들 것이다.

MB정권이 꿈꾸는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는

백번 양보하여 이러한 방송정책과 법안 제정 추진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정부 여당의 설명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번 언론관계법 개악은 심각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전반적인 기조와 관점은 한마디로 언론의 산업화이다. 대자본과 조·중·동 등에 방송산업을 넘겨주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방송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은 상업적 논리에 휘둘릴 것이며 방송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은 철저히 무시될 것이다. 오로지 돈이 되느냐 따라 프로그램제작은 기획되고 만들어지며 편성될 것이다. 경영의 논리에 의해 제작비는 깎이고 또 깎여서 마른 수건 짜듯이 될 것이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예술과 문화 등이 숨 쉴 공간도 사라진다.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방송인들의 건강한 의식과 자율성, 창의적 재능은 오로지 상업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소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벌이 장악한 방송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벌에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와 논평만이 범람할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폭로나 보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재벌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 세제 완화, 공적 규제 철폐 등 그들이 바라는 정책은 방송을 앞세운 여론 물이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추진 될 것이며

방송을 매개로 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여론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마저 진출한다면 그들의 여론 장악력이 방송까지 옮겨 붙어 오로지 수구적 보수 언론의 목소리만 전달될 것이다. 여론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여론 독과점이 우리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이 그토록 좋아하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을 제도를 두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과 민영화 정책이 80년대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추진되다가 요즘은 이들 정책의 부작용을 깨닫고 오히려 규제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언론의 공공성은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성의 보루다. 현실성도 없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방송을 자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더 이상 방송이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한국사회의 여론 형성 공간은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형성되어가고 있다. 한 축은 기존대중매체이며 다른 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매체공간, 그리고 마지막 축은 집회를 통한 직접적 토론과 정보교환이다. 이들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가 보도하고 만들어 낸 정보 등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토론되고 증폭 되며 이것이 다시 집회를 통해 확인되고 진화한다. 또 집회에서 논의 된 내용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 세 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는 공간인 것이다.

한 축의 공간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여론 형성과정의 왜곡되고 붕괴 된다.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 세 축 가운데 여전히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특히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에서는 대중매체, 그 가운데서도 방송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여론 형성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일단 의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인터넷 토론 공간 그리고 집회 등을 통해 진화하지만 불을 붙이는 데는 여전히 대중매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신문과 방송 지형에서 어떻게 민주적 매체 지형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이 문제에 집착하며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거세하려는 것도 여론형성과정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대중매체 지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점유율을 낮추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민주적 독립언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진보적 신문이 주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적 논조를 유지하는 신문들이 균형을 이루어 사회적 여론 형성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보수언론들만이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현재 한국의 신문 지형은 진보와 보수 신문의 지형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여론 지형이 왜곡되는 이유다. 따라서 신문 지형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토론 공간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자유로운 논의의 공간으로 남도록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 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여 인터넷 언론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중·동 등 그동안 여론 권력을 휘둘러온 집단이 다시 여론과 의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디어 공공성은 한국 사회가 수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도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 역대 정권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나 효율성 제고니 하는 시장주의를 잣대로 미디어 정책을 집행해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 신자유주의 미디어 정책을 지지해서 유료 채널의 무한 증대, 미디어 시장의 개방으로 미디어 공공성을 현저하게 위축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난으로 시대적 화두가 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거짓 논리를 만들며 여론을 속이고 있다. 방송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도 없으며 재벌이나 조·중·동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도 산업으로서 새로운 투자나 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술한 경험적 사례가 보여준다.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허구임을 웬만한 사람들은 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언론에 달렸다

시장논리가 강조되면서 미디어도 일반 상품과 같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수용자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시장중심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주의에 내몰린 언론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집중화로 인한 의견의 독점과 여론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시장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이론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사회적 개입이 2009년 오늘의 세계적 흐름이다. 오로지 사적이익을 앞세우고 시장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방송마저 시장의 영역으로 내몰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모든 규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공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규제의 틀을 어떻게 바꾸거나 재구조화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결과는 건강한 여론과 다양한 의견표명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권력과 입법부를 지배하고 있으니 언론관계법 개악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방송인들이 있는 한 우리 방송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YTN 노조, KBS의 사원행동은 방송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인 시련은 있겠지만 국민에 맞서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편이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군사정권시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 성과를 지키는 싸움에 우리의 삶과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에

서는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후퇴시키느냐를 가름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